정균환 vs 추미애 당 대표 '2파전'

민주 全大 7월6일…송영길·박주선씨 등 최고위원 도전

원내대표에 이낙연·김성곤씨 등 10여명 거론 '대혼전'

통합민주당이 오는 7월6일 전당대회를 개최키로 결정한 가운데 새로운 지도부 경선에 나설 후보군이 점차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광주·전남지역에서도 김효석 원내대표와 최인기 정책위의장 등 최소한 3~4명이 지도부 경선에 나설 예정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23일 통합민주당은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오는 7월6일 올림픽 체조경기장에서 전당대회를 개최키로 했다.

당초 통합민주당은 6월 중순께 전당대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마땅한 장소가 없어 7월6일로 연기했다.

민주당은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위원장에 김원기 의원을 선임하는 한편 손학규, 박상천 공동대표와 김 위원장 간의 협의를 거쳐 조만간 20인 이내의 준비위원을 임명키로 했다.

전당대회 개최일이 결정됨에 따라 당 대표와 최고위원, 원내대표 등 새 지도부 경선에 나올 후보군도 점차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현재로서는 당 대표와 최고위원보다는 원내대표 경선에 후보군이 대거 몰리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당 대표와 최고위원은 전당대회라는 전국 단위의 세력 싸움이 필요하다는 점 때문에 세력별 대표주자들이 거론되고 있는 반면, 원내대표는 4·9 총선 당선자를 상대로 한 비교적 소규모 선거란 점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현재 당 대표 경선은 4선의 정세균 의원과 3선의 추미애 당선자 간의 2파전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높은 가운데 김효석 원내대표와 정균환 최고위원 등이 후보군으로 부상하고 있다.

여기에 최인기 정책위의장도 구 민주계의 지지를 토대로 대표 경선 참여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일단 정 의원은 손 대표 계열과 구 열린우리당 세력의 암묵적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추 당선자는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이나 범동교동, 구 민주계의 지원사격이 예상된다.

김효석 원내대표와 최인기 정책위의장, 정균환 전 최고위원 등은 호남과 민주계의 내부 논의가 우선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고위원 후보로는 손 대표 계열에서 송영길 의원, 정동영 전 의장 계열에서 문학진 의원, 친노 진영에서 이광재 의원, 구 민주계에서 최인기 정책위의장과 김민석 최고위원, 박주선 당선자, 유종필 대변인 등이 거론된다.

원내대표 경선은 10명 이상의 후보가 출마 의사를 보이고 있어 대혼전을 예고하고 있다.

4선에서는 이석현, 이미경 의원이 재도전을 검토중이고, 3선에서는 원혜영, 이강래, 홍재형, 김부겸, 강봉균, 이낙연, 김성곤, 유선호, 정장선 의원 등이 거론된다.

그러나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출마 예상자의 경우 민주당이 지도부 선출 방식을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 변화의 여지가 크다.

현행 당헌은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분리 선출, 당 대표의 위상을 높이는 단일성 집단지도체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지만 투표를 동시에 실시해 1위가 당대표, 2위부터 최고위원을 맡는 방식으로 변경하자는 목소리도 있기 때문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문국현 '두문불출'

이한정 파문 이후 안 나타나

조만간 '대국민 사과문' 검토

4·9 총선에서 여권 핵심실세인 이재오 의원을 꺾고 화려하게 재기한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가 비례대표 이한정 당선자 구속을 전후해 며칠째 두문불출하고 있다.

문 대표는 지난 18일 삼성 특검 수사결과에 대한 기자회견을 가진 것을 끝으로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문 대표는 당초 19일에 4·19 민주묘지를 참배할 예정이었으나 이동하던 중 "몸이 너무 좋지 않다"며 묘역 참배에 불참했다. 22일에는 여의도 한 음식점에서 열린 총선 지역구 출마자 오찬 간담회장에 취재진이 몰리자 돌연 불참했으며 오후 당 회의에도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

문 대표 일정에 대해서도 당 관계자들은 "우리도 자세히 모른다"는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다.

그러나 문 대표의 이 같은 잠행 행보에 대해 무책임하다는 여론이 일반적이다. 문 대표는 이한정씨 문제에 대해서도 "난 모르는 일", "이한정씨 문제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모르쇠'로 일관, 당 대표로서 책임 회피 논란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문 대표 측 관계자는 "문 대표로선 예기치 못한 일을 겪게 돼 충격이 큰 상태로, 문 대표도 피해자"라며 "혼선을 피하기 위해 입장 전달 채널을 일원화한 차원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기존 정치권을 '구태정치'라고 비판하면서 정치개혁, 정당개혁을 주창해 온 문 대표로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클린 이미지'에 적지 않은 상처를 입게 됐다. 리더십에 치명타를 입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문 대표는 파문이 일파만파로 확산하자 조만간 성명이나 기자회견 등을 통해 비례대표 공천으로 물의를 빚은 데 대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22일 당 윤리위원회에 이한정씨의 출당 및 제명을 공식 요청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윤리위는 일단 당선무효소송 추이 등을 지켜보자며 최종 방침을 결정하지 않았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매장량 125배 뻥튀기 시세차익 424억 챙겨

주가조작 혐의 구속된 정국교씨

자원개발 사업의 가치를 과장 · 허위 공시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정국교 민주당 비례대표 당선자는 광물 매장량을 125배 가량, 환산가격을 66배 가량 '뻥튀기'해 424억여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것으로 검찰 수사결과 드러났다.

23일 검찰에 따르면 정 당선자는 지난해 보도자료 등을 통해 자신이 대표이사였던 상장사 에이치앤티(H&T)가 우즈베키스탄에서 태양전지 원료인 규사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몇가지 수치를 제시했다.

개발 대상 광산에 산화규소 순도 99%의 규사가 1천만t 가량 매장돼 있고 돈으로 환산하면 100억불 가량이 된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검찰 조사결과 해당 광산에서 순도 99%의 규사 매장량은 8만t 가량이었고 광산 전체에 매장된 규사의 순도를 98%까지 매겨준다고 해도 그 가격은 1.5억불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매장량을 125배 가량, 환산가치를 66배 이상 부풀린 것이다.

이같은 '거짓말'에 주가가 폭등하면서 정 당선자는 자신의 주식 71만여주를 팔아 424억여원 상당의 차익을 챙겼다. /연합뉴스

'엎친데 덮친' 孫…리더십 위기

정국교 당선자 구속에 '책임론' 대두…지도부 신경전도

통합민주당 박상천 대표가 23일 당산동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국교 비례후보에 대한 주가조작 문제를 충분히 검토하지 못했다고 발언하자 손학규 대표가 곧바로 충분한 검토를 했다고 반박한 뒤 서로 어색한 표정을 짓고 있다. /연합뉴스

전당대회 불출마를 선언한 통합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자신이 추천한 정국교 비례대표 당선자가 검찰에 구속되며 리더십 위기에 직면했다.

개인적으로는 깨끗한 이미지의 훼손이 우려되는 상황이고 당내에서는 상대 계파의 흔들기가 시도되고 있는 것이다.

우선 당 일부 세력에서 손 대표 책임론을 들고 나설 태세다. 손 대표나 당 전체적으로는 '야당 탄압론'을 주장하며 검찰에 맞서고 있지만 손대표 흔들기를 통한 전당대회 기선 제압을 노리는 후보가 있을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23일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같은 신경전의 조짐이 나타났다.

구 민주당계의 박상천 공동대표는 "지금 생각해보면 비례대표 공천심사위원 중 일부가 정 당선자의 주가조작설에 대한 깊은 검토를 요구했을 때 당 지도부가 이를 소홀히 한 점이 후회된다"며 "치밀하게 검토됐다면 이번 사태는 막을 수 있었던 것 아니냐"고 사실상 손 대표를 겨냥했다.

손 대표 측에서는 억울하다는 반응이다. 우선은 금감원에서 주가조작과 관련, 혐의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에 추천을 했다는 것이다.

문제는 검찰의 수사 칼날이 손 대표를 포함한 지도부까지 들어올 경우다. 이 경우에 손 대표에 대한 당 안팎의 비판과 함께 당 장악력과 리더십에 손상을 입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손 대표 측은 이번 사태를 '야당에 대한 정치탄압'으로 몰아가며 승부수를 띄울 가능성이 크다. 위기를 기회로 삼아 이명박 정부에 대항하는 강력한 야당 지도자의 이미지를 각인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손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 회의에서도 "국민과 당원 여러분께 우리 당의 비례대표 당선자가 구속돼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당선자 신분으로서 새로운 사실관계나 증거가 나타나지도 않았고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도 없는 상태에서 구속수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검찰의 수사를 비판했다.

그는 이어 "특별당비는 비례대표 당선자들이 모여 자발적이고 공개적으로 (논의)하고 그 결과로 이뤄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나아가 정 당선자로부터 10억원을 차용한 과정에 대해 "비례대표 등록 이후인 3월26일 당이 직원봉급을 줄 수 없는 형편에서 서울 서부지법으로부터 3월31일까지 국고보조금이 나오면 갚겠다고 날짜까지 확정지어 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이번 사태가 반전의 기회로 삼기에는 당내 세력에 대한 손 대표의 영향력이 아직도 미약하고 여론이 우호적이지 않다는 점이 걸림돌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현행 '특별당비' 문제점 뭔가

법 규정·금액 제한 없어 '돈 공천' 악용 소지

'비례대표 돈 공천' 논란이 일면서 '특별당비'와 '대여금'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사실상 정치권에 '검은 돈'이 유입되는 통로 구실을 하고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특별당비'는 정치자금법이나 선거법에 따로 규정돼 있지 않은 정치용어다. 납부사유도 분명치 않고, 모금액의 제한이 없으며 당원이면 누구나 낼 수 있다. 대여금과 관련해서도 한도액이라든지, 이자율 등에 대해 아무런 제한이 없다.

특별당비와 대여금이 검은 돈의 통로로 여겨지는 것은 이처럼 명확한 법 규정이나 한도가 없기 때문이다.

특별당비의 경우 '정당은 소속당원으로부터 당비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된 정치자금법에 따라, 당원으로부터 받았다면 금액이 얼마든 회계처리만 하면 사실상 합법화된다. 각 당의 당헌·당규에도 '당내 행사 또는 공식선거를 위해 납부할 수 있다'는 식으로 규정되어 있어 얼마든지 악용할 수 있는 소지를 남겨뒀다. 대여금 역시 말 그대로 빌린 것이라는 점에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는 게 정치권의 판단이다.

검찰은 이에 따라 최근 제기된 일련의 '돈 공천'논란과 관련, '공천 대가성'을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가 사법처리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회는 지난 2월 공직선거법을 일부 개정하면서 누구든지 정당의 후보공천과 관련해 금품,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받거나 약속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제47조의2를 신설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 "공천대가성이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공천받은 사람의 인지도나 경력, 돈의 출처 및 납부시점과 경위 등을 전반적으로 밝혀내면 위법한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